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현금지원과 서비스지원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보편적 수당의 원리를 구현해 나갈 필요

김은지 연구위원

02-3156-7104 kimeunji@kwidimail.re.kr

요약

- 아동수당은 아동을 키우는 가족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형태의 현금급여로, 자산조사를 통한 낙인이나 빈곤의 덧 문제를 유발하지 않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사회적 급여의 가장 진화된 형태로 볼 수 있음.
- 본 연구는 아동수당이 아동양육의 어떤 비용까지를 잠재적인 비용지원의 범위로 볼 것인지, 기존 유자녀가족 지원정책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를 모색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아동수당이 목표로 하는 소비지출의 지원범위를 필수재이면서 개별재의 성격이 강한 소비지출로 제한하였음. 이와 같은 재화를 소비지출 영역에서 확인해보면 식료품, 피복신발, 가사집기 및 광열수도 공공이용료 등이 포함됨. 즉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의(衣)·식(食)과 관련된 범주와, 주(宙) 관련 범주 중 가사집기 및 공공 난방·수도 이용료 등을 우선적 현금지원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음.
 - 해외 주요 국가들의 가족 관련 소득보장제도를 분석한 결과, 주요 국가들은 가족 관련 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녀관련 세제 혜택을 다층적으로 구비하고 있었으며, 전체 유자녀가족 지원체계 내에서 아동수당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 아동수당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적 급여로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었으며, 급여액은 대부분 아동양육에 사용될 것이므로 과세범위에서도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음.
-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함.
 - 아동수당은 우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과 별도로 지급하되, 장기적 소득보장 패키지 방향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갈 필요가 있음.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커버하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추가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아동수당과 병급을 허용함.
 - 아동수당은 전계층에 보편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역진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조세체계 내에서 해결하도록 함.
 - 아동양육비용 중 현금으로 지급할 범위와 서비스로 지원할 범위를 구분하고, 보육서비스의 경우는 서비스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양육수당은 아동수당에 장기적으로 흡수, 통합될 필요가 있음.

- ▶ 아동수당은 아동을 키우는 가족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형태의 현금급여로, 자산조사를 통한 낙인이나 빈곤의 뒤틀 문제를 유발하지 않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사회적 급여의 가장 진화된 형태로 볼 수 있음.
 - 아동수당은 193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 서구 복지국가의 가족지원체계의 중심을 이룬 정책으로서, 비교적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모든 유럽 국가에 도입이 완료된 정책임. 이전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파격적인 형태의 보편적 수당으로서, 수직적 재분배보다 수평적 재분배를 본격적으로 개념화한 특별한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김수정, 2002).
- ▶ 이와 같은 개념적 특이성 때문에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아동수당의 성격과 지원근거에 대한 새로운 논거가 필요함.
 - 김수정(2002)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유럽국가에서 아동수당은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용을 보전하는 것을 전반적인 목표로 하는 가운데, 인구나 국력에 대한 관심, 거시 경제관리의 차원, 보편적 급여를 통한 계급연대적 복지제도의 정비 필요성, 양육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 필요성 등의 다양한 요인이 아동수당의 도입에 영향을 미쳤음. 이와 같은 요인들은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아동수당의 도입을 추동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한국의 아동수당은 여러 제도의 각축 과정에서 특정된 제도적 경로 내에서 도입되기 때문에, 제도적 역할 재분배의 논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아동수당이 아동을 키우는 가족에 대한 정책이라면, 어떤 비용까지를 잠재적인 비용지원의 범위로 볼 것인지, 기존에 확대되었던 보육서비스나 양육수당 등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저소득층 부가급여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소비지출의 분류와 현금지원의 필요영역

- ▶ 아동을 양육하는 데에 다양한 소비지출이 발생한다면, 그 중 어떤 영역은 국가가 책임질 것인지, 책임진다면 어떤 영역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어떤 영역은 서비스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소비지출의 비목을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필수적인 정도에 따라 ‘필수재’와 ‘선택재’로, 주로 국가에 의해 대규모로 제공되거나 통제되고 집합적으로 소비되는 정도에 따라 ‘집합재’와 ‘개별재’로 구분할 수 있음. 예컨대 식료품은 가장 분명한 개별재이자 필수재의 성격을 보이며, 피복신발, 가사집기 등은 개별재이면서 필수재에 해당하는 항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여유진, 2002).
- ▶ 이와 같은 지출항목 분류에 따라 아동양육의 지원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해볼 수 있음.
 - 우선 필수재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함. 특히 아동의 경우 초기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아동을 위한 소비지출 필수재를 국가가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동의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필수재 중 집합재로서의 가치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컨대 식료품이나 피복신발비의 경우는 개별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개별적으로 생산된 재화에 대한 소비자원으로서 현금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필수재이면서 집합재로서의 성격이 비교적 분명한 경우에는 현금이 아닌 서비스로 제공하고, 국가가 안정적인 집합적 소비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임. 이와 같이 집합재의 성격이 강한 경우, 집합적 소비체계가 이미 구축된 경우에는 그 공공이용료에 대한 현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집합재의 성격이 강함에도 공공 소비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시장에 공급이 맡겨져 있어 사실상 개별재의 성격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한 지원은 시장공급을 더욱 활성화시켜 공공 소비체계를 잔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용료에 대한 지원은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이 영역은 때로 불평등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영역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어, 공공 전달체계가 구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비용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음.

- ▶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현금지원으로서 아동수당의 지원범위를 필수재이면서 개별재의 성격이 강한 소비지출로 제한하고자 함. 나아가 필수재이면서 집합재의 성격이 있는 경우, 공공 이용료에 대해서도 지원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 민간 이용료에 대해서는 공공 전달체계가 활성화되기 이전까지라는 전제하에서 부분적으로 포함 가능한 것으로 함. 이와 같은 지원범위를 앞서의 소비지출 영역에서 확인해보면 식료품, 피복신발, 가사집기 및 ‘광열수도’의 공공이용료가 포함될 수 있음. 즉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의(衣)·식(食)과 관련된 범주와, 주(宙)는 거주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이용료를 우선적인 현금지원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 실제로, 아동수당의 지원근거와 범위를 서술한 역사적 문헌들에서도 이와 같은 영역을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것을 명시한 경우들이 발견됨. 예컨대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는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음식, 의복, 광열수도 욕구를 충족시킬 수준이어야” 하며, “음식, 의복, 광열수도 비용을 고려해서 주 8실링으로 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Beveridge, 1942: 155). 1952년 규정된 ILO의 사회보장 협약 또한 식료품, 피복신발, 가사집기 지출을 아동수당의 우선적인 지원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아동양육비 지출 분석

- ▶ 본 연구는 2016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아동양육비 지출을 분석하였음. 가계동향조사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소비지출항목을 집계하였으며, 소득5분위별로 무자녀가구, 1자녀가구, 2자녀가구를 구분하여 평균값을 제시하였고, 노인가구는 제외하였음.
- ▶ 아동양육비 분석결과를 주요 소비지출 범주 확대에 따라 자녀수별, 소득분위별로 제시하면 <표 1>과 같음. 2016년 가계동향조사에서 비노인가구의 평균 미성년아동수는 1.69명으로, 1자녀 비용과 2자녀 비용 사이에서 아동수당의 수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아동수당이 빈곤층에 대한 최저비용의 보장이 아니라 모든 아동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비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최저소득층이 아닌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비용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 가장 좁은 범위의 지출을 목표로 하여 식료품, 의류·신발비용만을 추계해 볼 경우 1자녀는 13만 2천원, 2자녀는 자녀당 9만 4천원 정도의 비용이 평균적으로 지출되므로, 아동수당 지원수준은 1자녀와 2자녀 사이인 10만원을 아동1인당 지원액으로 제시할 수 있음. 이는 현재 아동수당의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함. 즉 현재의 10만원의 아동수당은 필수재이면서 개별재의 성격이 가장 분명한 식료품, 의류·신발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 다음으로 좀더 필수재의 성격이 약한 가정용품·가사서비스의 비용을 추계해볼 경우, 1자녀는 17만 1천원, 2자녀는 12만원 정도의 비용이 평균적으로 지출됨. 추가로 집합재의 성격이 강한 주거·수도광열의 비용까지 포함하더라도 1자녀는 20만 7천원, 2자녀는 13만 6천원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 즉 필수재의 성격이 좀 더 약한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집합재의 공공이용료에 주로 해당되는 주거·수도광열 지출에 대한 지원까지 목표로 할 경우, 아동수당의 지원수준은 15만원을 아동1인당 지원액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 한편 아동에 대한 소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집합재로 소비되는 것이 적절하나 선택재로서 소비되고 있는 교육지출까지 포함할 경우, 1자녀는 52만 8천원, 2자녀는 38만 4천원 수준까지 급격하게 비용이 증가하게 됨. 공교육의 역할을 회복하고 집합재로서 교육시스템이 적절히 작용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이 영역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평균 수준까지 교육비지출을 아동수당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원 적절성이나 재정 규모 측면에서도 과다할 것으로 판단됨.

<표 1> 소비지출 범주 확대에 따른 아동1인당 평균 양육비

(단위: 원)

자녀수					총계
				+ 교육	
			+ 주거·수도광열		
식료품, 의류·신발	+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1자녀	131,950	170,824	207,056	527,630	884,991
2자녀	94,425	120,465	136,531	383,941	566,914

자료: 2016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재분석

- ▶ 본 연구에서는 아동수당의 지출범위를 필수재이면서 개별재의 성격이 분명한 식료품, 의류·신발을 1차적 지원범위로, 필수재의 성격이 보다 약하고 집합재의 성격도 일부 가지는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주거·수도광열지출을 2차적 지원범위로 할 것을 제안함. 1차적 지원범위에서는 현 수준에서 10만원을, 2차적 지원범위에서는 현 수준에서 15만원 정도를 지출액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비용은 이후 물가상승에 맞추어 함께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임.

주요국의 가족 관련 소득보장제도 분석

- ▶ OECD 주요 국가들의 아동수당 등 가족급여와 공공부조, 조세체계와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 우선 보편적 아동수당이 분명하게 자리잡고 있는 북구국가들의 경우, 아동수당과 양육비지원수당(양육비대지급수당)이 전계층 보편급여로 명확하게 자리잡고 있고, 이들은 공공부조의 자산조사 대상인 소득에 포함되지만,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음.
 - (핀란드) 한부모의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이들 국가의 공공부조의 경우 급여수준 자체가 가족구성과 아동의 연령을 반영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공공부조에 아동을 위한 특별 제도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음. 즉 제도간의 역할 분배가 매우 분명하며, 수당은 명확하게 보편적 급여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는 생계비 지원의 성격으로 공공부조의 자산조사 대상에는 포함되며 과세소득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독일) 아동과 관련된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 아동수당의 경우 보편적 수당이지만, 조세체계와 연동되어 있음. 독일의 아동수당은 수당과 자녀세액공제 중에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 부모의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의 경우 후자를 통해 혜택을 받게 되며, 부모의 수입으로 본인들의 생활유지는 가능하지만 자녀의 최저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일부 가구에게는 추가 아동수당이 지급됨. 이와 같은 아동수당들은 북구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공공부조의 자산조사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과세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음. 이는 수급가구의 생계비지원 목적의 소득은 공공부조의 자산조사 범위에 포함하고, 다른 목적의 소득은 포함하지 않는 원칙과 아동의 최저생계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임. 독일은 복잡한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들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원칙을 수립해두고 있음. 가족급여의 하나로 분류되기도 하는 한부모 부가급여는 공공부조와 연동된 시스템으로, 공공부조 자산조사나 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 (영국) 모든 소득보장제도가 탈빈곤에 집중되어 있고, 유자녀가족 지원체계 역시 조세환급시스템을 활용하여 빈곤층에 급여를 집중시키고 고소득층의 급여는 최소화하는 정책구조를 보여주고 있음.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아동수당제도는 최근 일부 고소득층에 대해 아동수당을 세금으로 반납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음. 그 외에 선별적 세액공제 형태의 아동세액공제, 근로세액공제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아동세액공제는 영국 유자녀가족 지원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아동수당과 두가지 세액공제는 모두 자산조사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별개로 운영되며, 최근의 고소득층에 대한 아동수당 과세 이외에는 과세범위에도 해당되지 않음. 특히 공공부조 소득여부에 아동 관련 급여들이 적용 제외되고 있는 것은, 이들 수당이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보편적 생계비 지원의 특징보다는 빈곤층에 대한 선별적 제도의 성격이 강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본) 선별적인 형태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자산조사가 더 엄격한 한부모급여도 따로 구축하고 있음. 이 급여들은 공공부조의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고, 과세소득에 포함되지도 않음.

▶ 이상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 검토한 국가들의 대다수는 가족급여를 과세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히 제시한 것처럼 아동의 생계비는 과세대상이 아님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단 영국과 같이 고소득층에 대한 급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부 계층의 아동수당에 과세를 부과하는 형태는 발견됨.

▶ 가족급여 중 보편적 급여의 경우 대부분 공공부조의 자산조사 소득에 포함되고 있으며, 이는 생계비 지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이중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독일의 원칙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됨. 스웨덴, 핀란드, 독일 등 보편적 수당이 확충된 국가들에서는 아동수당이나 양육비대지급수당과 같이 보편적 급여의 경우 모두 공공부조 자산조사 소득에 포함함. 단 독일의 경우 보충아동수당과 같은 선별적 급여는 공공부조의 자산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영국) 보편적 아동수당을 공공부조의 자산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저소득층에게 집중된 급여체계를 보여줌.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급여를 선별적으로 운영하며, 공공부조 내에 급여를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분리운영하고 있음.

▶ 아동수당에 한정해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아동수당은 보편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공공부조의 자산조사 소득에는 포함하고 있으며, 과세소득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는 것은 영국으로, 영국의 아동수당은 보편수당이지만 공공부조 자산조사에 포함하지 않고, 최근에는 일부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고 있음. 아동수당을 제도 자체에서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국가는 가족급여가 충분하지 않은 일본이 유일함.

<표 2> 공공부조와 가족급여 간 대체관계

국가	가족급여명	보편급여/선별급여, 아동연령 (학생인 경우)	공공부조 자산조사 소득에 포함여부	과세소득에 포함여부
스웨덴	아동수당(Barnbidrag, child benefit)	보편, 15세(19세)	포함	비과세
	양육비지원수당 (Undehållsstö, maintenance support)	보편, 15세(19세)	포함	비과세
핀란드	아동수당 (Lapsilisä, child benefit)	보편, 16	포함	비과세
	한부모추가 아동수당 (Lapsilisän Yksinhuoltajakorotus, single-parent supplement to child benefit)	보편, 16	포함	비과세
	양육비지원수당 (Elatustuki, child maintenance allowance)	보편, 17	포함	비과세
독일	아동수당/가족세액공제 (Kindergeld)	보편, 18(25)	포함	비과세
	보충아동수당 (Kinderzuschlag)	선별, 18(25)	-	비과세
	양육유지수당 (Unterhaltsvorschuss)	보편, 11 *최대 6년	포함	비과세
	한부모 부가급여 (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	선별, 18(25)	-	-

국가	가족급여명	보편급여/선별급여, 아동연령 (학생인 경우)	공공부조 자산조사 소득에 포함여부	과세소득에 포함여부
영국	아동수당(Child Benefit)	보편, 15(19) *고소득층 과세로 선별효과	비포함	비과세, 고소득층 일부과세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선별, 15(19)	비포함	비과세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선별	비포함	비과세
일본	아동수당(Jido Teate, child allowance)	선별, 15	비포함	비과세
	한부모급여(Jido Fuyo Teate, lone parent benefit)	선별, 18	-	비과세
한국	한부모 아동양육비	선별, 12	비포함	비과세

3

정책제언

- ▶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음.
 - 아동수당은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특성별 지출 항목 내에 포함하여 기초보장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되, 장기적인 소득보장 패키지 방향은 향후에도 논의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 검토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아동수당은 생계비 지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공부조 자산조사 범위에 포함되고 있었음. 그러나 수당 제도가 확충되지 못한 국가들에서는 공공부조 자산조사 범위에 아동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사례들도 발견됨.
 - 아직까지 아동에 대한 수당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단계에서 공공부조 자산조사 범위에 아동수당을 포함하는 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수준을 낮출 수 있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당체계가 구축된 이후에 공공부조 제도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커버하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추가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아동수당과 병급을 허용함.
 -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꼭 필요한 재화 중에서 개별적으로 소비되는 것이 적절한 식료품, 의류 등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공공부조 제도 내에서 한부모가족의 추가적인 욕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의 목표를 구분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음.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아동수당의 상호 공제는 장기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아동수당의 상호 공제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제도개선의 속도와 방향으로 판단됨.

- 아동수당은 전계층에 보편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자 한다면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조세체계 내에서 역진성을 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검토한 주요 국가들의 지원체계에서 아동수당은 대부분 보편적 급여로 지급되고 있었으며, 고소득층을 제외하려는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자산조사를 통해 제외하기 보다는 보편적 지급 이후에 과세를 통해 환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 지급 단계에서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식은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족에 대한 비용 지원이라는 아동수당의 본래적 목표를 훼손할 수 있으며, 아동수당이라는 사회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적 연대에도 큰 결함을 낳을 수 있는 위험한 방식이 될 수 있음.
- 아동양육비용 중 현금으로 지급할 범위와 서비스로 지원할 범위를 구분하고, 보육서비스의 경우는 서비스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양육수당(child-care allowance)은 아동수당(child allowance)에 장기적으로 흡수, 통합될 필요가 있음.
 - 한국사회에서는 그동안 서비스 중심의 정책지원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제한적인 소득보장을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 서비스와 수당의 역할분배에 대한 적절한 논리가 구축되지 않고 있음.
 - 본 연구는 개별재의 성격이 강한 지출은 수당으로, 집합재의 성격이 강한 지출은 서비스로 지원할 것을 제안함.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기본적인 의(衣)·식(食)에 드는 비용과 주(宙)에 필요한 일부 공공요금에 대한 지출은 현금으로 지원하고, 돌봄이나 교육과 같은 지출은 서비스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역할분배가 될 것임.
 - 양육수당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육서비스로 지원되도록 하며, 보육서비스가 지원되기 어려운 지역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 될 필요가 있음. 물론 이러한 원칙이 단기간에 정책으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제도들 간의 논리적 역할 정립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문헌

김수정(2002). 복지국가 가족지원체계의 구조변화에 관한 일연구: 가족수당과 보육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여유진(2002). 한국에서의 소비지출 불평등에 관한 연구 : 집합적 소비의 사회복지적 함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주관부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보육정책과,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